

문 11.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업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.
- ② 업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.
-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.
-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,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.

문 12.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
- ②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
- ③ 계층제적 조직 기반
- ④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

문 13. 균형성과표(BSC)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, 정책순응도, 민원인의 불만을,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.
-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, 적법적 절차,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.
-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, 자본 수익률,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.
-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, 내부 제안 건수,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.

문 14. 매트릭스(matrix)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.
- ②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,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.
- ③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
-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.

문 15.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

정부회계의 ‘발생주의’는 정부의 수입을 (㉠) 시점으로, 정부의 지출을 (㉡)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.

- | | |
|--------|--------|
| ㉠ | ㉡ |
| ① 현금수취 | 현금지불 |
| ② 현금수취 | 지출원인행위 |
| ③ 납세고지 | 현금지불 |
| ④ 납세고지 | 지출원인행위 |

문 16.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.
-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 요인으로 간주한다.
-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.

문 17. ‘고위공무원단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우리나라에서 ‘고위공무원’이 되기 위해서는 ‘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’을 이수해야 하고, ‘역량평가’를 통과해야 한다.
- ② 미국의 ‘고위공무원단’ 제도에는 업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.
-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‘고위공무원단’ 제도를 도입하였다.
- ④ 미국에서는 ‘고위공무원단’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.

문 18.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.
-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,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.
- ③ 정부가 “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.5조원이다”라고 발표했다면,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.
-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‘양곡관리’, ‘조달’ 등이 운영되고 있다.

문 19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ㄴ.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.
- ㄷ.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, 조례로 확정된다.
- ㄹ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.

- | | |
|--------|--------|
| ① ㄱ, ㄴ | ② ㄴ, ㄷ |
| ③ ㄱ, ㄹ | ④ ㄷ, ㄹ |

문 20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나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,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·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·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나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·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